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820

2020년 9월 9일
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. 8. 12. 김인제 의원 외 10명 공동발의

나. 회부일자 : 2020. 8. 21.

다. 상정일자 :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

- 2020년 9월 9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○ 서울시는 정부와 발맞춰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였으나,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.

○ 또한, 코로나19가 단기적인 충격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,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산업·경제 분야에 큰 변화를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 구조의 전환과 유망 신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실정임.

○ 이에 따라, 서울시 차원에서 효과적인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

영세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의 보호 등 민생안정대책을 수립하고자 “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” 구성을 제안함.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37조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　　타 : 해당사항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김선희)

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

○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.

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

○ 2019년 12월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,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'코로나19')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(WHO)는 펜데믹(세계적대유행)을 선언하였으며,

- 현재 국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'코로나19'가 재확산 되고 있고, 세계 총 확진자 수도 약 2,500만명[1]을 넘어 재유행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임.

○ 코로나19의 대응한 각국의 이동제한조치 영향으로, 세계경제는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으며, 국내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고강도 '사회적 거리두기' 등으로 소비심리와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.

- 특히 도·소매업, 숙박업, 음식점업, 예술·스포츠·여가 관련업 등 서비스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,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.[2]

○ 지난 8월 27일 한국은행은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1.1%p 낮춘 -1.3%로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,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첫 역성장 가능성을 예고하였음.[3]

---

1) 세계 코로나-19 확진자 현황,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2020. 8. 31. 14시 기준).
2) 『2020년 8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』, 중소기업중앙회.
3) 한국은행, 2020. 8.27.

○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7월 우리정부는,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을 극복하고,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‘한국판 뉴딜 종합계획’(붙임. 1)을 발표하였음.

- 한국판 뉴딜은 튼튼한 고용 안전망과 사람투자를 기반으로 디지털(digital) 뉴딜과 그린(green)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하며, 2025년까지 총 160조 원(국비 114.1조 원)을 투입해 총 190.1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.

○ 서울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방역·시민안전은 물론, 민생경제 안정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·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고, 포스트 코로나 경제계획을 수립(붙임. 2)하는 등 서울시 차원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시점임.

- 또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‘비상경제대책TF’를 출범하고, ‘제2차 민생경제 대책’(붙임. 3)을 수립·시행 중에 있으며, 코로나19에 따른 기업·소상공인·관광 등 각 분야별 피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‘서울시 민생경제대책반’(붙임. 4)을 가동하고 있음.

○ 이와 같이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, 서울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,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,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,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(’20.8.31 기준)발효 중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, 특별위원회 운영의 차질이 불가피한 바, 구성 시 원활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활동시기 등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

○ 동 안건과 관련하여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37조제2항[4]에 따라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결과, 의견없음.

4)제37조(특별위원회)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

(재적의원 13명,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)

※ 부대의견 : 「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」와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, 활동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8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	1820

발의연월일: 2020년 8월 12일
발 의 자: 김인제, 이병도, 김화숙, 김창원, 추승우, 문병훈, 전병주, 이석주, 유정희, 김혜련, 신원철 의원(11명)

1. 주 문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,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37조에 따라 서울시 포스트 코로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“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”를 구성한다.

나.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,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
다.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.

2. 제안이유

○ 서울시는 정부와 발맞춰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였으나,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.

○ 또한, 코로나19가 단기적인 충격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,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산업·경제 분야에 큰 변화를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 구조의 전환과 유망 신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실정임.

○ 이에 따라, 서울시 차원에서 효과적인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의 보호 등 민생안정대책을 수립하고자 “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” 구성을 제안함.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,
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37조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　　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○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코로나19(COVID-19)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해 신속하고 투명한 방역 체계의 운영과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우수한 대처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.

○ 하지만, 확진자 수의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침체되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급감하였고, 사업 부진과 조업중단으로 실업률이 급증하는 등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.

○ 특히, 최근에 발표된 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-3.3%로 역성장하였고, 올해 경제 성장률 역시 마이너스로 예측되고 있어 향후 경제 회복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.

○ 더욱이, 코로나19가 단기적인 충격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, 비대면 문화 확대, 무인화 기술 촉진, 국가 간 무역장벽 부활 등 산업·경제 분야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다.

○ 이에 따라,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해 디지털·환경 분야의 산업과 일자리를 양성하는 '한국판 뉴딜정책'을 발표하였다.

○ 서울시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·소상공인과 비정규직·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격변하는 산업·경제 환경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.

○ 하지만, 현재 서울시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신속하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.

○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“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” 구성을 결의한다.

2020. 8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